2024년 국가직 9급 행정학(2024.3.23.)

• 해설 : 이승철

1 정책과정에서 철의 삼각(iron triangl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의회 상임위원회 ② 행정부 관료 ③ 이익집단 ④ 법원

해설

• 철의 삼각(Iron Triangle) 또는 하위정부론(Sub-government)은 미국의 정책과정을 설명하며 제시된 모형으로서 각 정책영역별로 정책과정의 비공식 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참여자인 의회 상임위원회(정당×), 행정부처(관료조직, 고위관료) 3자가 은밀하게 결탁한 장기적·안정적·호혜적인 동맹관계를 통해 상당한 독립성을 지닌 하위정부를 형성함으로써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답 ④

2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에서는 잭슨(Jackson)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② 공직의 일은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③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④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이다.

해설

① (×) 1829년에 취임한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은 동부 상류계층에 의하여 독점되어 있던 관직을 서부 개척민을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엽관주의를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라고 선언하고 미국 인사행정의 공식적인 기본원칙으로 채택하.
② (×) **A. Jackson 대통령의 1829년 의회 연두교서 내용** : "공직에서 수행되는 모든 일은 평범하고 간단한 것들로서 기본적인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노력만 하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한 사람이 공직에 오래 근무하면서 오는 폐해가 그 사람이 경험의 축적을 통해 공직에 기여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③ (○) **실적주의의 핵심요소** : 기회균등(공개경쟁채용시험), 실적·능력 기준 임용,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④ (×) 실적주의는 **능률성과 전문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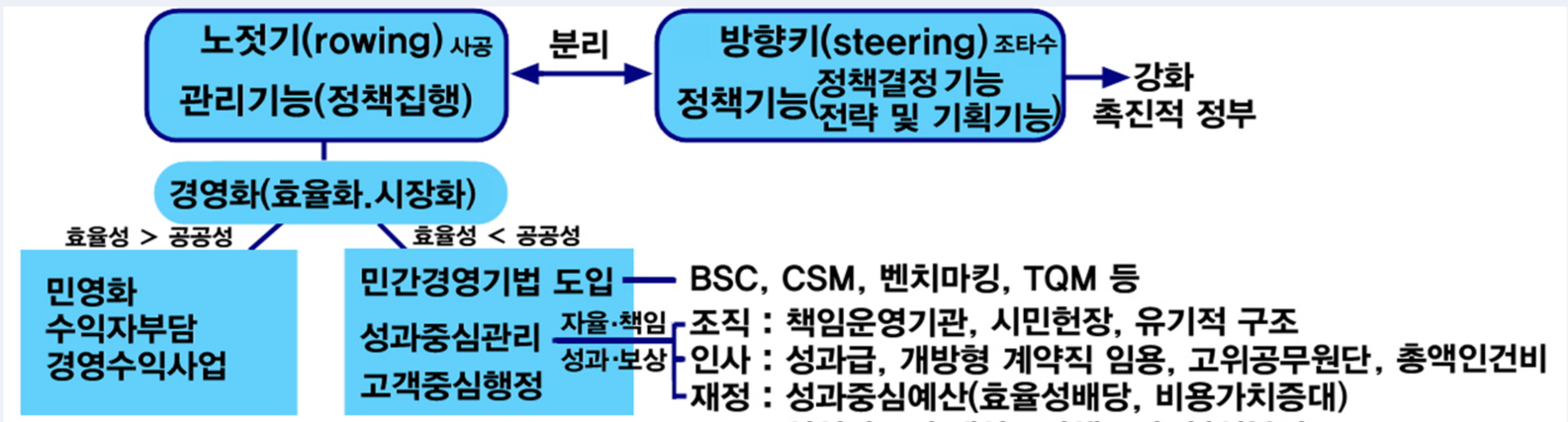
답 ③

3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정부 강조
②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③ 정부 부문 내의 경쟁 원리 도입
④ 결과 혹은 성과 중심주의 강조

해설

① (×) 시장주의를 토대로 경제성·생산성·효율성을 추구하고 고객중심행정을 강조했지만 공익성, 사회적 형평성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③④ (○)



답 ①

4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②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③ 정부는 시장개입 및 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한다.
④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해설

① (×)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② (○) 시장실패 :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
③④ (○)

답 ①

5 영기준예산(Z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②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에 영기준예산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
③ 예산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decision unit)이며 조직 또는 사업 등을 지칭한다.
④ 집권화된 관리체계를 갖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소수의 조직구성원만이 참여하게 된다.

해설

① (○) 각 부서가 추진해오던 사업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을 엄밀히 분석하여 예산지출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예산제도임
② (○) 우리나라는 1983~1984년 부분적으로 도입했지만 분석의 전문성 결여, 우선순위 설정의 어려움, 공무원의 인식 미흡 등 문제로 성공적으로 적용되지 못함.
③ (○)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 예산운영단위)** : ZBB 예산편성의 기본단위로 조직 관리자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 편성의 결정권을 갖는 **사업단위(단위사업) 또는 조직단위(단위조직)**. 다른 활동과 중복되지 않고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사업단위.
* ZBB는 사업단위 뿐만 아니라 조직단위도 의사결정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단위에 한정되는 PPBS보다 더 융통성이 있는 제도.

PPBS	의사결정단위는 사업단위	⇨ 단위 설정의 경직성
ZBB	의사결정단위는 사업단위 또는 조직단위	⇨ 단위 설정의 융통성

④ (×) 계획예산(PPBS)보다 운영 면에서 전문성을 적게 요구하므로 조직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권화된 관리체계를 가짐. 정책결정항목이 위로 올라가면서 검토되고 순위가 결정되므로 전문참모가 아닌 계선기관의 중간관리자나 하급관리자에게 참여(훈련) 기회 제공. 중앙의 통제를 완화하면서도 중앙의 목표가 부처의 예산운영단위에서 존중되도록 하고 단위기관 고유업무의 특성을 중시하므로 다양한 이질적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체에서 그 효율성이 높을 수 있음.

답 ④

6 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단체(NGO)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시민 여론을 동원해 정책의제설정, 정책대안제시, 정부의 집행활동 감시 등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②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③ 사법부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과 관련된 법적 쟁송이 발생한 경우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④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특정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구성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② (×) 정당은 정책과정에 대한 비공식적 참여자.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 :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자
① 입법부(의회,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② 행정부(행정수반 – 대통령·수상, 행정기관, 행정관료) ③ 사법부(법원, 법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④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공무원, 지방행정기관)	정부조직 밖에서 정책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① 정당(여당·야당) ② 이익집단·압력단체 ③ 일반국민, 여론 ④ NGO(시민단체) ⑤ 전문가·학자, 정책공동체 ⑥ 언론·매스컴

답 ②

7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연도,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 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채무의 지출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계속비와 동일하지만,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계속비와 차이가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

-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 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금전급부의무)를 지고 연도를 경과하여 다음 연도 이후에 채무이행(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예산에 반영되지 않지만, 금전급부 의무가 있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 국회 의결이 있을 때 채무를 부담할 권한(채무부담권)이 발생한다. **채무부담권만 생기고 지출권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예산으로써 지출하려면 별도의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회계연도 이후의 채무이므로, 해당 연도의 예산지출과는 무관하다. 즉, 세출예산은 지출원인행위와 현금지급행위가 국회의 한 번의 승인으로 가능하지만,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원인행위(채무부담계약)에 대한 국회의 승인과 별도로 현금지급(지출)을 위한 국회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

☑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로 하여금 다음 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채무부담권만 부여**
☑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채무부담과 지출권한에 대한 것이다.(×)**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금액, 계속비 범위 안의 것' 이외에 한하여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다.(×)**

㉣ (×)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단년도 예산 원칙(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시기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차이가 있다.

-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구분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채무부담을 행하는 연도	대부분 초년도에 전액 채무부담	초년도 뿐 아니라 그 이상에 걸쳐 채무부담행위 가능
지출권한	**채무부담권만 부여, 지출권한은 부여 받지 못함**	**채무부담권과 지출권한을 잠정적으로 부여 받음**
대상경비	대상경비가 한정되지 않음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한정
이월 사용	다음 연도에 지급해야 하므로 다음 다음 연도로의 **이월이 불가능**	미지급 연부액은 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체차이월 가능**
준예산	준예산으로 지출 불가	준예산으로 지출 가능
장점	재원·사업의 탄력적 운영	재원의 안정적 확보
단점	차기 연도 재원 부담	고정적 경비화

답 ①

8 정책평가의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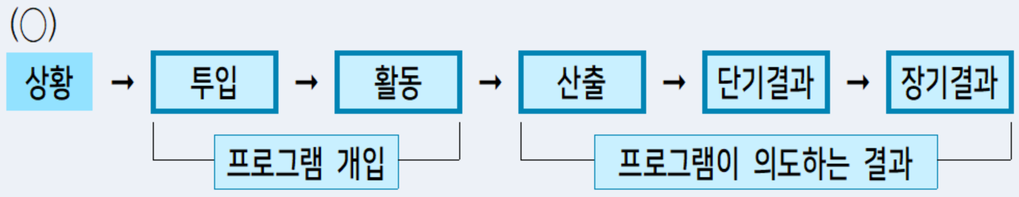
① 정책프로그램의 요소들과 해결하려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투입(input) – 활동(activity) – 산출(output) – 결과(outcome)로 도식화한다.
② 산출은 정책집행이 종료된 직후의 직접적인 결과물을 의미하며, 결과는 산출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③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정책프로그램의 목표달성 여부를 보여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④ 정책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해설

①④ (○) **정책평가의 논리모형과 목표모형**

구분	논리모형(logic model ; 정책프로그램 논리모형)	목표모형(target model; 목표달성 평가모형)
의의	정책 프로그램 요소들과 정책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투입(input) ⇨ 활동(activity) ⇨ 산출(output) ⇨ 결과(outcome)로 정리**해 주는 하나의 다이어그램이자 텍스트.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 목적과 중·단기 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
특징	① 정책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어 정책집행 과정 및 성과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함. ② 정책이 핵심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므로 **정책형성 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함.** ③ **정책 논리의 분석 및 정리 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 논리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	① **목표달성에 대한 측정**(정책집행 결과와 당초 설정된 정책 프로그램 목표의 일치 여부 확인)과 발생한 정책결과물이 프로그램 실행으로 인한 것인가를 평가하여 확인. ② 평가과정 : 정책프로그램 목적의 인식·구별 ⇨ 정책 프로그램 목적의 의미 명확화와 우선순위 결정 ⇨ 확인된 목적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전환 ⇨ 정책 프로그램 목적 달성 정도의 측정 ⇨ 정책 프로그램이 목적 달성을 촉진 또는 저해했는지 여부 판단 ③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 여부를 선별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명확성과 단순성**을 주요 특징으로 함.

② (○)



- **상황(situation)** : 정책사업 시행을 견인한 문제와 상황
- **투입(input)** :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한 사업의 결정과 함께, 사업에 투입되어 활용될 자원의 내용과 양
- **활동(activity)** : 투입이 산출로 전환되는 과정.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시
- **산출(output)** : 투입과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일차적 직접적인 결과물로서 활동의 산물로서 발생하는 재화나 용역의 양
- **결과(outcome)** : 산출로 인한 변화. 프로그램 개입을 통해 성취하려는 대상의 상황 변화의 정도.

③ (×) 정책이 핵심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목표의 달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줌

답 ③

9 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혹은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 줌으로써 정부의 정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②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소득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③ 도로 건설, 하천·항만 사업과 같이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④ 사회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해설

① (×) 앨먼드(G. Almond)와 파월(B. Powell)의 분류 중 상징정책에 대한 내용임. 로위(T. Lowi)의 분류에는 상징정책이 없음.
-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 헌정(憲政)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 관련 정책 – 주로 정부기구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와 관련되며, **정치체제에서 투입을 조직화하거나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으로 게임의 규칙을 설정. 예 정부기관 신설·폐지·변경, 선거구조정, 선거, 공직자 보수, 군인퇴직연금
- **상징정책(Symbolic Polic)** : 어떤 상징을 통해 정치체제의 정당성·정통성을 높이거나 정책순응 확보, 국민적 일체감과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정책.
  예 국경일, 국기, 애국가, 각종 기념 조형물(동상, 기념비), 반공이념, 각종 축제·행사·기념식, 기념일, 자치단체를 상징하는 나무·꽃·동물 등 지정.

답 ①

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어야 한다.
②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이하 법 규정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① (○)

-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 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② (○)

-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

-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제8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④

11 신고전적 조직이론인 인간관계론이 강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기계적 능률성
② 공식적 조직구조
③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④ 인간의 사회·심리적 요인

해설

①②③은 고전이론의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④는 신고전이론의 사회인관

인간과의 변화

인간관		인간의 특성	관리전략	관련이론
고전 이론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① 인간의 합리적 타산적 측면 ② **인간욕구의 획일성(경제적 욕구)** ③ **인간의 피동성** ④ **동기부여의 외재성**(경제적 유인)	**교환모형** • 관리자는 **통제자** 역할 • 경제적 유인과 직무수행의 교환 • hard approach(당근과 채찍) • 엄격한 감독·통제	• 과학적 관리론 • 원리접근법 • Weber의 관료제론
신고전 이론	사회인관	① 인간의 비합리적·감성적 측면, 인간의 집단성·사회성 ② **인간욕구의 획일성(사회·심리적 욕구)** ③ **인간의 피동성** ④ **동기부여의 외재성**(사회적 유인)	**교환모형** • 관리자는 **중개자**(intermediary) 역할 • 사회적 유인과 직무수행의 교환 • soft approach(연성관리 ; 사회적 욕구의 충족) • 중간관리층의 역할 중시, 집단 존중 관리	1930년대 인간관계론
현대 조직론	자아실현인관 (자기실현인)	① **인간욕구의 다양성**(복수 욕구) ② 자아실현욕구를 가장 중시 ③ **인간의 능동성·적극성** ④ **동기부여의 내재성**(자아실현)	**통합모형**(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통합) • 관리자는 **촉진자·촉매자·면접자** 역할 • 교화모형·수용모형 • 통합형 관리(신뢰·협동관리) • 보람 있는 일과 성장기회 제공	1960년대의 후기인간관계론, 탈관료제, 성장이론 (Argyris, McGregor, Herzberg, Maslow)
	복잡인관 (복합인관)	① **인간욕구의 다양성** ② **인간욕구의 변이성·가변성** ⇨ 정형화·유형화 곤란	**상황조건적합적 관리(융통성 있는 관리)** • 관리자는 **진단가**(diagnostician) 역할 • 개인의 욕구에 따라 상이한 관리전략 • 구성원의 욕구의 변이성·개인차 인식	상황적응이론 E. Shein Lawless의 Z이론

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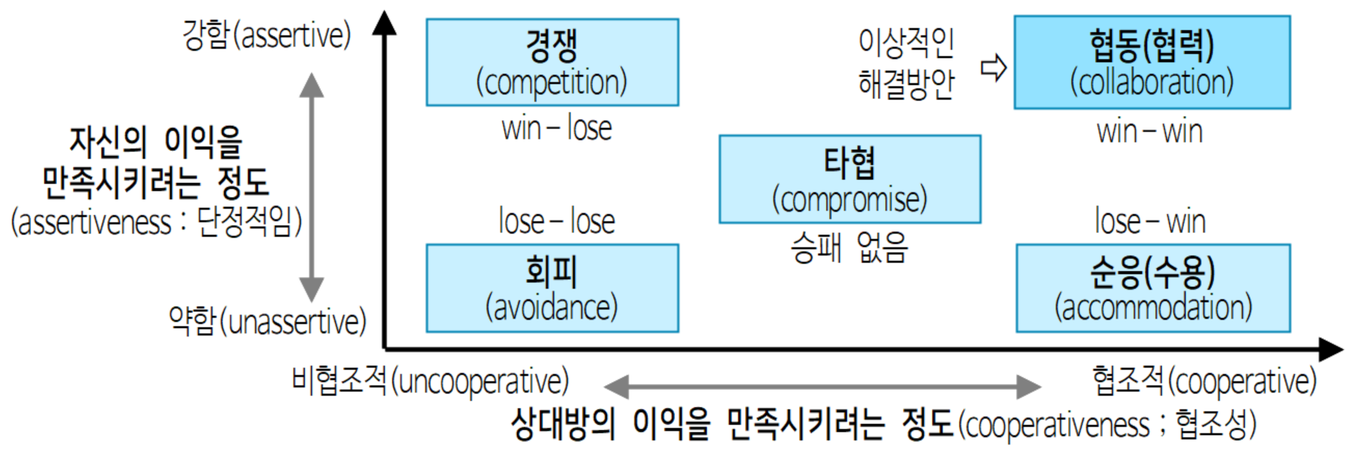
12 갈등관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피(avoiding)는 갈등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② 수용(accommodating)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협조한다.
③ 타협(compromising)은 갈등 당사자 간 서로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형으로 'win－win' 전략을 취한다.
④ 경쟁(competing)은 갈등 당사자가 자기 이익은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최소화한다.

해설

③ (×) **협동(협력)(collaboration)** : 갈등 당사자 간 서로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형으로 'win－win' 전략을 취함.
타협(compromising) : 자신과 상대방 이익의 중간 정도를 만족시킴(상호 양보).

• 토마스와 킬맨(K. Thomas & R. Kilmann)의 대인적 갈등의 관리방안(2차원 갈등해결 모형)



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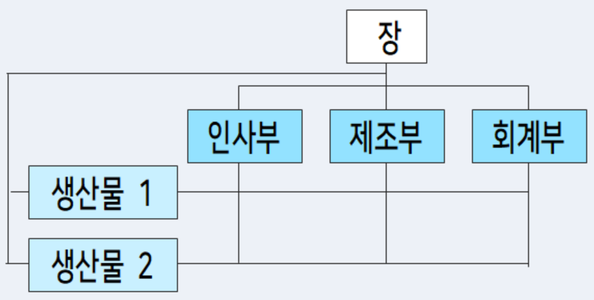
13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회사는 장기적인 제품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각 부서에서 총 10명을 차출하여 팀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 팀에 소속된 팀원들은 원부서에서 주어진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품개발을 위한 별도 직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팀원들은 프로젝트팀장과 원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게 된다.

①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한 혼합형 구조이다.
② 동태적 환경 및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③ 조직 내부의 갈등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④ 명령 계통의 다원화로 유연한 인적자원 활용이 어렵다.

해설

① (○) **매트릭스 구조(matrix structure ; 행렬조직, 복합구조, 주형(鑄型)조직)** : **기술적 전문성(기능구조의 특성)과 신속한 대응성(사업구조의 특성)이 동시에 강조**됨에 따라 등장한 조직구조로서 전통적인 **계서적 특성을 갖는 수직적**(종적)**인 기능구조**(직능조직)**와 수평적**(횡적)**인 사업구조**(프로젝트조직)**를 화학적**(물리적으로×)**으로 결합**시켜 신축성을 확보하도록 한 혼합적·이원적 구조의 상설조직. **기능부서 통제권한은 수직적으로, 사업부서 간 조정권한은 수평적으로 흐르는 2원적 권한체계**. 조직구성원은 기능과 사업의 양 조직에 중복 소속되고 기능적 관리자(주로 인사)와 프로젝트 관리자(주로 사업) 간에 권한이 분담됨.



② (○) **매트릭스 구조가 적합한 상황**

㉠ 생산라인 간 **인력과 자원의 공유와 신축적 운영**을 필요로 할 때(사업부서들이 **사람과 장비 등을 함께 사용**해야 할 필요가 클 때)
㉡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중간 정도의 크기**일 때, **부서 간 상호의존관계가 존재**하고 내부자원 활용에 규모의 경제가 있을 때
㉢ 2개 이상의 핵심적 산출물에 대해 기술적 품질성(기술적 전문성)과 수시적 제품개발(제품혁신)의 압력이 있을 때(**기술적 전문성도 높고 산출의 변동도 빈번해야 한다는 이원적 요구**가 강할 때)
㉣ **조직 환경의 변화가 심하고 불확실하며**,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비일상적**일 때

③ (○), ④ (×) 명령 계통의 2원화로 인한 갈등이 초래할 수 있지만 신규직원 채용이나 장비의 구매 없이도, 기존의 전문요원 및 장비를 공유하게 되므로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유연성을 높인다.

매트릭스 구조의 장·단점

장점	단점
① 신규직원 채용이나 장비의 구매 없이도, 기존의 전문요원 및 장비를 공유하게 되므로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특수사업의 추진이 용이함. ②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조직단위 간 **정보흐름**(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켜 예상치 못한 문제의 파악과 새로운 해결책 모색에 기여. ③ 구성원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기술을 개발하면서 **넓은 시야와 목표관을 가질 수 있고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켜 동기부여에 유리.** ④ **신축성·적응성이 요구되고 불안정하고 변화가 빈번한 환경에서 적절한 대응**과 복잡한 의사결정 가능. 새로운 환경수요 발생시 별도로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 신속한 대처 가능. ⑤ 각 기능부문과 사업부문 간 조정, 조직원의 협동작업으로 상호 이해와 통합 확보. ⑥ 경직화되어 가는 대규모 관료제조직에 융통성 부여.	① 두 상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받는 **이중권한체계**로 인하여 조직구성원의 **정체성 약화와 역할갈등을 초래하고 권한과 책임한계가 불명확함.** ②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결정이 곤란함.** 조직 간 할거주의가 있을 경우 조정이 곤란. ③ 조직관리의 이중권한체계, 권력다툼 등으로 인해 기존 1원적 명령복종체계보다 **객관성·예측가능성이 떨어짐.** ④ 두 상관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며 상·하간 부드러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어렵고, 다양한 인간관계 기술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며 권력균형 유지에 많은 노력이 요구됨. ⑤ 조직구성원이 매트릭스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업무처리의 혼선을 초래.

답 ④

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④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해설

②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직무관련자'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답 ②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은?

> 교육 참가자들을 소그룹 규모의 팀으로 구성해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방식이다. 우리나라 정부 부문에는 2005년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① 액션러닝 ② 역할연기 ③ 감수성훈련 ④ 서류함기법

해설

액션러닝(action learning)[실천학습·행동학습·문제해결학습]

- 교육 참가자들이 **소집단**을 구성하여 각자 또는 전체가 팀워크를 바탕으로(집단학습) 동료와 촉진자(facilitator, 러닝코치)의 도움을 받아 실패의 위험을 갖는 **실제 문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동시에,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질의와 성찰과정**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Learning by Doing(실천학습) 방식
- 전통적 교육훈련 방식인 주제·강의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실천 중심** 방식으로 전환.
- 우리나라는 2005년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관리직 기본교육에 도입,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과정에 활용**.

답 ①

16 공무원과 관할 소청심사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기도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甲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②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 乙 –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
③ 소방청 소속의 소방위 丙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④ 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 丁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설

① (○) 지방공무원의 소청심사는 광역자치단체(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② (×) **검사의 경우 소청심사제도가 없음.**
③ (○) 소방공무원의 소청심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④ (○) 교원의 소청심사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소청심사기관

행정부	국가공무원	경력직	일반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특정직	외무·경찰·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검사	**소청심사제도 없음**
				교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육부)
				군인 장교 및 준사관	국방부 중앙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 항고심사위원회
				군인 부사관	각 군 본부의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	국방부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 항고심사위원회
		특수경력직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별정직의 경우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함.		
	지방공무원	경력직	일반	각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육소청심사위원회(지방직 교육직렬)	
		특수경력직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입법부(국회)		국회 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법부(법원)		법원 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중안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답 ②

17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 조정 시 일정기간 이내에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④ 자치경찰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며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해설

① (○) **조례조례발안(조례 제정·개폐청구)**-「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의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것을 직접 제안하는 제도	
근거	① 1999년 지방자치법에 최초 규정(2000년 시행). 주민이 자치단체장에게 청구,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 부의 ② 2022년부터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었던 청구권자·대상·요건·절차 등을 개별법으로 정하도록 함.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하는 규정을 포함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해당자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한 경우 포함) ②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 요건 해당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	
청구요건	다음 청구권자 총수의 비율 기준 이내에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의 연대 서명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시·군·자치구			
	인구 800만 이상	인구 800만 미만		인구 100만 이상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인구 5만 미만
1/200		1/150*주1)			1/100	1/70	1/50	1/20

*주1) 단, 특별법 상 제주특별자치도는 1/110, 세종특별자치시는 1/100 이상 1/20 이하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도 가능.

청구객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청구(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	
청구불가 사항	①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③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②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④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찬성·요구×)하는 사항
청구절차	**대표자**	청구시 청구인 대표자 선정,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주민청구조례안)을 첨부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 의장이 증명서 발급 ⇨ 서명 요청 활동 ⇨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의장에게 제출
	공표·열람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게 함.
	조례안 발의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6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함.
조례안 의결시한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해야 함.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	

②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장관에게 경계변경 필요 지역 등을 명시해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 가능**.

㉡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 간 경계변경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

㉢ 행안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 못한 경우**나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변경에 대해 조정**할 수 있음.

③ (×)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④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답 ③

18 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염배출부과금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유인적 규제유형에 속한다.
②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③ 명령지시적 규제는 시장유인적 규제에 비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④ 사회규제는 주로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며 작업장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이 있다.

해설

①③ (○)

규제의 수단 :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

구분		명령지시적 규제(직접규제)	시장유인적 규제(간접규제)
의미		**법령·행정처분·내부방침 등에 규제기준을 직접 설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력을 행사**(위반시 강력한 처벌). 민간의 유인구조에 대한 영향은 없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되, **수용시 인센티브**를 제공(예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하고, **미수용시 제재**(예 과세, 부담금)를 가하여 **민간의 유인구조에 영향을 미침.**
방 식		**직접적·통제적·경직적** –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규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함	**간접적·유도적·신축적** – 주로 법령보다 정책에 근거하므로 무책임하고 포괄적인 규제가 될 수 있음
재량성		민간의 재량성 약함 **정부의 재량성 강함**(규제기준의 위임입법화, 대상기준 선정 등)	**민간의 재량성 강함**(민간이 규제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 정부의 재량성 약함
이행수단		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강제적 방법** – 처벌 강도 강함	행정적 수단(세제혜택, 보조금, 부담금, 오염권 거래 등) **비강제적 방법** – 처벌 강도 약함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낮음**(규제의 집행 비용이 많이 소요됨)	**경제적 효율성 높음**
규제의 효과성		**규제효과가 직접적·즉각적이고 큼**(규제의 집행력이 강력)	**규제효과가 간접적이고 작음**(민간의 재량에 맡기므로)
정치적 수용도		**정치적 수용도·설득력 높음**(**일반 국민들의 이해가 쉽고 명확하여, 강하고 직관적인 설득력을 가짐.**)	**정치적 수용도 낮음**
사례	환경관련 규제	• 환경**기준** 설정 – 기술기준 예 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 성과기준 예 오염배출량 제한	• 공해배출 부과**금** 제도, 보조금제도 • 폐기물처리**비** 예치제도(예치금 사전 예치 후 폐기물 처리시 환불) • 공해권 경매(거래)제도 –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산업안전	• 보건·안전**기준** 설정과 공장검사	• 상해**세** 부과(근로자의 작업상 상해시 고용주에게), 안전정보 제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 진입 자격**요건** 제한(인허가에 의한 진입규제) • 물품안전**기준** 설정 • 허위·과장광고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정보공개 : 제품정보표시규제(품질·성분·효능·성능·제조일자·유효기간 등), 공시규제(서비스계약규제, 기업공시규제 등) • 품질인증제도, 등급 사정, 제품 표준화(중량표시, 규격통일 등)
	차별에 대한 규제	• 고용**기준** 및 법정 의무고용 비율 할당(할당임용제) • 차별금지 입법	• 정부계약을 통한 유도(차별을 행한 기업을 정부입찰계약에서 탈락) • 출생지나 학력 표시 금지

② (×)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포지티브 규제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규제의 개입 범위 :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규제개혁 방향은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구분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특징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사전규제** 예 주로 허가제·인가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사후규제** 예 주로 신고제·등록제
법 규정 형식	**~할 수 있다. ~이다. - 허용 사항 명시** (특정 행위만 허용, 나머지는 금지)	**~할 수 없다. ~가 아니다. - 금지 사항 명시** (특정 행위만 금지, 나머지는 허용)
입증책임	**피규제자가 규제법규 준수를 입증**	**규제기관이 규제법규 위반을 입증**
효과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제약됨**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보장됨**

④ (○) **규제의 영역 : 경제적 규제,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

구 분	경제적 규제(광의)		사회적 규제 (Social Regulation)
	경제적 규제 (Economical Regulation)	독과점 규제 (Antitrust & Unfair Trade Regulation)	
개 념	①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 : 기업 설립, 개인사업 개시, 제품·서비스 가격, 생산량, 품질, 거래상대방과 거래방법 및 조건에 대한 의사결정 및 관련 행위 규제 ② 동일 산업에 속한 기업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진입규제는 기존 기업과 신규 참여 희망 기업의 경쟁을 제약, 가격·품질 규제는 기업의 가격경쟁·품질경쟁을 제한)	①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로서 진입, 가격, 생산량, 품질, 공급대상 및 조건 등을 직접적 규제대상으로 하는 점은 경제적 규제와 동일. ② 시장경쟁 제약보다는 **시장경쟁을 창달**하거나 시장경쟁 하에서와 비슷한 시장성과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짐	①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 :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안전 위협, 소비자 권익 침해, 근로자 차별대우 등 기업의 행위가 기업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횡포를 방지 ②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각종 위험 증대에 대응해 등장한 현대적 규제
종 류	① **가격규제** :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② **진입규제 : 사업 인**·허가, 면허, 수입규제 ③ **퇴거규제(퇴출규제)** : 특정 지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 못하게 함 ④ **기타 품질, 생산량, 공급대상, 조건, 방법 등에 대한 규제**	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② **합병(기업결합)의 규제** : 주로 수평적 결합(동종업체 간 합병)을 강하게 규제 ③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제한** ④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공해규제와 환경보전** ② **소비자보호규제** : 의약품규제, 식품안전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제조물책임제등 ③ **작업장 안전과 보건규제** : 산업재해보상, 산업안전보건 ④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답 ②

19 「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의 원칙 중 하나이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① (○)

>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6. 정부는 예산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 (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 기금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됨.

>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

>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 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예산 원칙	• **제16조(예산의 원칙)**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국가재정법 27조, 68조의3) ① **작성 의무** :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② **내용**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 ③ **작성자**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중앙관서의 장**(기획재정부 장관x, 환경부장관x),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금관리주체**. 기획재정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
결산	•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국가재정법 57조의2, 73조의3) ① **작성 의무** :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② **내용** :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 ③ **작성자** :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는 **중앙관서의 장**(기획재정부 장관x),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는 **기금관리주체**.

답 ③

20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정보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 거래정보의 기록을 중앙집중화된 서버나 관리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을 기반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된 형태로 배분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의 탈집중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① 인공지능(AI)
② 블록체인(block chain)
③ 빅데이터(big data)
④ 사물인터넷(IoT)

해설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

1. **의의**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을 말함.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해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며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라고도 부름. 블록체인의 개념은 금융 거래의 핵심인 "거래장부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출발. 모든 거래는 장부에 기록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장부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으로 도입된 암호화폐.
2.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
㉠ **탈중앙화** : 중앙 집중식 엔터티(개인, 조직 또는 그룹)에서 분산 네트워크로 제어 및 의사 결정을 이전. 분산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투명성을 사용하여 참여자 간의 신뢰에 대한 필요성을 줄임. 해당 네트워크는 참여자가 네트워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서로에 대한 권한이나 통제를 행사하는 것을 막음.

㉡ **불변성** : 무언가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을 의미함. 누군가가 공유 원장에 거래를 기록하면 참여자는 거래를 조작할 수 없음. 거래 레코드에 오류가 포함된 경우, 실수를 되돌리기 위해 새 거래를 추가해야 하며 두 거래 모두 네트워크에 표시됨.

㉢ **합의** : 블록체인 시스템은 거래 기록을 위한 참여자 동의에 관한 규칙을 설정. 네트워크 참여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만 새로운 거래를 기록할 수 있음.

답 ②